

합리적이고 비전있는 정책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 성 택

(숭의여자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일찌기 ‘버틀러’는 도서관 정책의 목표는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정보자원을 통제하는 사회적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창한 바 있다. 이는 국가사회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장치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며, 그래서 도서관이 국가사회 문화발전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지식과 복지를 형성하는 터전이 되도록 국가의 책임하에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도서관 육성책을 국가 문헌정보관리정책으로 채택하여 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도서관 육성책의 기본이 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법은 1963년도에 제정 공포된 이래 27년만에 단 한차례 개정된 바 있고, 현행법은 1994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 도서관계에서는 그 내용의 불합리성과 후진성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대안을 적극 제시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그 동안 도서관계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쉽없이 도서관 발전책을 건의하고 촉구하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도서관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산적한 정책적 당면과제들이 이리저리 미뤄지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 문제는 상존해 있고 도서관계의 절규의 목청은 좀체로 낮아지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또 다른 경악을 금치 못할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것은 첫째,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명칭변경을 통한 관장직의 비전문직화 획책이고, 둘째 요사이 불거진 문제로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부 공립의 공공도서관 민영화 추진계획이다.

첫번째 문제는 공공도서관 기능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공공도서관 운영 주체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저의로서 우리의 현실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기적 발상이므로 용납될 수 없는 내용이다.

두번째 문제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정책입안자들이 문화정책의 본질과 중요성(국민의 문화, 정보능력 개발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기초임)을 도외시 한 채 단순한 경제논리와 계량위주의 근시안적인 발상으로써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내용이다. 국가 대표도서관의 민영화 방안은 세계 유례없는 방안이며 공립공공도서관 민영화 계획 역시 일본에서 이미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하나 결국 실패하여 현실성과 합리성이 없는 정책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도서관 문제는 국가의 주요 시책으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시사한 것이다. 그래서 각국의 도서관 정책방향도 모두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최근 일련의 불합리한 그리고 본질에 역행하는 도서관 정책은 마땅히 합리적이고 비전있는, 그리고 정상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현 정부는 도서관 정책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하기를 거듭 촉구한다.